

# 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명예에 관한 범죄’ 증가추세..1만4천 명 입건

대검찰청은 올해 1~9월 ‘명예에 관한 범죄’로 1만4천여 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세분화하면 명예훼손 혐의 입건자가 7천3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모욕 혐의 4천300여 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온라인) 1천800여 명,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691명, 사자(死者) 명예훼손 32명 등이다.

명예에 관한 범죄 입건자는 2006년 1만7천여 명에서 2007년 1만9천여 명으로 증가추세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입건자는 2006년 3천100여 명, 지난해 3천600여 명인 반면 올해 9월까지 1천

800여 명으로 월별 평균 입건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불법 사실정보지(속칭 짜라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6일

### 법원 “‘BKK 의혹 보도’ 한나라당 명예훼손 아니다”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이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한나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의 BKK 연루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과거에 회사를 세우고 투자하는

등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아 그가 후보가 됐다는 등 한나라당의 업무에 관한 문제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당선 가능성이 떨어져 소속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작아지는 등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기사 때문에 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직접 저하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와 BKK투자자문을 거쳐 이명박 후보가 설립한 LKe뱅크 등에 투자됐고 BKK와 LKe 사이의 금전 거래로 미뤄볼 때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이 후보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 추천에 관한 당의 내부 검증 과정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8일

### 프랑스, 명예훼손에 엄격 ... 타인 비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에선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한국 같은 개념의 포털이 없고 댓글 문화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 수단을 불문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모욕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은 특히

국적이거나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성적 경향, 신체 장애 등을 거론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경우 가중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6월 이하의 징역이나 4,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결은 더욱 엄격하다.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허락받지 않은 사생활 공개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다.

올 초에 공개된 ‘거액 배상 톱 10’에는 프랑스의 ‘국민 앵커우먼’인 클레르 샤잘 등 유명 방송인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금액이 수억~수십억 원에 이르렀다.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애인과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거나 그들의 이혼 스토리를 세세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중앙일보 2008년 10월 10일

## 법원, 허경영 항소심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선고

지난 해 17대 대선에 출마해 슬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9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씨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설을 주장하지만 박 전 대표의 결혼의사가 없고 박 전 의원과 찍은 사진도 편집된 것으로 판단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행사장에서 박 전 대표와 허 씨가 찍은 사진도 박 전 대표가 주변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허 씨가 몰래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 초청돼 북핵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5분간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허 씨의 주장도 당시 허 씨 말고 또 다른 한국 인사가 초청됐다는 점, 초청장의 문법이 틀리는 등 자료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점, 당시 허 씨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과의 독대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허 씨가 항소심 마지막에 와서야 취임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2,500달러의 금전을 지급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허 씨 발언의 신빙성은 더욱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는 허 씨의 주장도 입증할 자료들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관련자들도 사실관계를 부정해 사실 무근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북핵 정책 비밀 보좌관이라는 주장 역시 당시 의전 일지에 허 씨에 대한 기록이 없고 박 전 대통령 시절 고등학교를 졸업한 허 씨가 북핵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갖췄을 것이라고도 예상되지 않아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허 씨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믿지 않을 것으로 추측돼 원심의 판결보다 중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허 씨는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수십 명의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입장한 뒤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오히려 허 씨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흥분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허 씨 측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함께 초청됐다는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과 당시 주미대사였던 한승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와 기사를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 2008년 10월 9일

## ‘내부고발’ 감사원 前직원 무죄 확정

1996년 ‘효산론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전 감사원 직원에 대해 수차례 재판이 반복된 끝에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55) 전 감사원 직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씨는 1996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국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를 중단시켰

다.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감사원에 의해 고소를 당한 현 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은 “현 씨의 기자회견은 감사원 간부 등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간부가 콘도 승인 관련 부분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려고 지시해 더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가 중단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간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씨가 ‘외압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어 공표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씨의 양심선언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간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2008년 11월 14일

##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인터넷매체 보도는 명예훼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인터넷 언론매체 프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의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외에는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사건발생 6일이나 지나서야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던 기자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7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린티어타임스는 지난 2005년 12월 27일자 기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지역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파티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인 것으로 밝혀지자 보도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매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은 500만 원을 2심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률신문 2008년 11월 28일

## 일본, 포털에 댓글 관리 책임

일본에선 댓글을 올리는 개인보다 인터넷 사이트 관리·운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과 악플 등 피해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2002년에 만든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때문이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악플 등을 삭제하고, 이를 올린 발신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 보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법무성에 따르

면 지난해 418건으로 2002년의 5.6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적으로 만든 사이트(10만5000여 개 추산)는 악플과 집단 따돌림(이지메)의 온상이 됐고, 이로 인해 등교 거부·자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그러자 문부과학성은 피해 사례·해결책을 담은 ‘인터넷 이지메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올 7월에는 ‘정보 도덕지도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학생

들의 비공식 사이트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 경찰청은 초·중·고 학교를 돌면서 매년 한 차례씩 ‘안전교육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교통안전·유괴 예방 방법을 소개했으나 2년 전부터 만남 사이트·악플·사기 등 인터넷 범죄 예방 방법과 인터넷 댓글 매너 중심으로 바꿨다. 사이버 범죄 상담실과 관련 비영리법인 상담 전화번호 등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중앙일보 2008년 10월 10일

## 동아 ‘국감향응 성접대’ 소송 패소

지난해 10월 국감의원들이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지난 8일 당시 논란의 당사자였던 임인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동아일보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저녁식사

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성접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보도로 인해 임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자가 성 접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 임 전 의원이 공천에 탈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감의원들의 향응

제공 보도는 공익적인 문제인데다 임 전 의원도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해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아일보가 국감의원들이 거액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보도 때문에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되는 징계를 받아 소송을 냈다.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15일

## 포털업계, 악플과의 ‘전쟁’

포털업계가 악플과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의 인터넷포털 네이버는 최근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물 의 열람을 임시로 차단하는 게시중단 서비스 신청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편했다.

기존에는 게시중단을 신청하려면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 만에 간편하게 게시중단 서비스 요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한 뒤 직접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으로 악플을 만들어내는 ‘재료’ 격인 각종 악성 루머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다.

다음 또한 최근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 악플의 부작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다음 뉴스 서비스에서는 댓글 내용이 뉴스 화면 하단에 그대로 노출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댓글 내용 대신 댓글 수만 보이도록 바뀌었다. 이용자들이 댓글 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의견보기’를 클릭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인터넷 윤리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퀴즈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2006년부터 싸이월드를 통해 인터넷 안전실명제를 실시해온 SK커뮤니케이션즈 역시 회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선플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싸이월드는 캠페인 미니홈피에서 홍보용 이미지를 스크랩하고 댓글을 다는 회원에게 미니홈피 꾸미기 아이템을 증정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하루에만 25만 명이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싸이월드는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선플달기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다양한 회원 참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KTH의 과란 역시 온라인 토론 서비스 ‘티위’에 악플 필터링 및 검색 기능을 개편하고 댓글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상습적으로 악플을 남기는 회원을 ‘공개수배’, 발언권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22일

## 출판사 및 저자들, ‘국방부 불온서적’ 관련 2억 원 손해소

국방부가 북한찬양 및 반자본주의 등을 이유로 군 반입을 금지한 ‘불온서적’들의 저자와 출판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출판업계 및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녹색평론사, 후마티나스 등 11개 출판사와 ‘불온서적’의 저자 11명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금서조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행위”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온서적’의 지정이 언론에 보도돼 전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마치 해당 저자들 및 출판사들의 사상이 반사회적, 반정부적인 것으로 낙인 찍혔다”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출판사 및 단독 저자 16명에게는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공동저자 6명에게는 500만 원씩 모두 1억9000만 원을 배상하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신문광고도 게재토록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7월 ‘불온 서적’의 군내 반입 차단을 전군에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은 시인 ‘김남주 평전’과 동화작가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느님’, 조선소 여성노동자 출신인 김진숙의 ‘소금꽃 나무’, 프레시안 특별취재팀의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세계화의 그늘과 해법을 담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 23권이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는 2003년 한 방송의 책 소개 프로그램에서 권장도서로 뽑혀 수십만 부가 팔렸으며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지난해 10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 또 ‘북한의 우리식 문화’는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 책을 북한찬양서적으로 분류했다.

이 중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책들은 ‘지상에 순가락 하나’, ‘소금꽃나무’, ‘해과 한반도’ 등 모두 18권으로, 중복출판사와 저자 등을 포함해 11개 출판사와 11명의 저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뉴시스 2008년 10월 27일